금남로에서

정재현

망국병 '지역 갈등' 누가 부추기는가

이웃나라 일본이 전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대지진과 쓰나미의 대재앙에 방사능이란 인재(人災)까지 겹치면서 경제대국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안전국가가 하루 아침에 가장 위험한 국가로 전락할 줄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국가나 개인이나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모양이다.

우리도 남의 불행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호(號) 역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난파(難破) 직전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부 충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 분열로 좌초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일본과 다를 뿐이다.

사분오열된 대한민국號

MB 정부 들어 망국병인 지역갈등이 치유되기는커녕 영·호남을 넘어 국토 전체로 전이되고 있다. 지자체 간 국책사업 유치전이 경쟁을 넘어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과학벨트 사업은 나라를 네 동강내고 있다. 경기, 충청, 호남, 영남권이 자기 지역이 최적지라며 임전무퇴(臨戰無退) 태세다. 망국적 지역 다툼의 모양새가 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건 TK와 PK 간 결투도 가관이다. 유치에 실패한 지역은 폭동이라도 일으킬 기세다.

국제공항 문제는 서남권도 둘로 갈라놓았다. 광주·전남과 전북이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놓고 혼탁한 감정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애초 충북 오송 집적화로 추진되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 신서지구로 양분된 이후 양 지역이 관련시설 유치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을 둘러싼 경남·전북 간 갈등 역시 위태로울 정도로 첨예하다.

지역감정이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금의 지역갈등은 갈 데까지 간 느낌이다.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며 서로 물고 뜯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이성이나 공동체 의식, 국익(國益)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오직 '내 지역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탐욕만이 판을 치고 있다.

문제는 지역갈등으로 나라가 거덜이 날 지경인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정리는 둘째 치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오히려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작금의 지역갈등은 현정부의 태생적인 편협성과 편파성에서 비롯됐다. MB 정부는 출범부터 '고소영', '강부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특정 지역·계층·종교에 편중됐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하는 일마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는 다른 쪽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며 갈등을 조장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도권 집중의 심화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수도권은 이제 국가의 모든 자원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반면 지방은 더욱 쪼그라들어 특단의 지원과 대책이 없으면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것이 바로 지자체마다 국책사업 유치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유다. 혹자는 최근의 갈등을 지역 이기주의로 돌리고 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생각해 봐라. 당장 굶어 죽을 판에 눈 앞의 '쌀자루'에 생사를 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지방에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기대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자립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 국가경영에 균형과 형평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균형발전만이 분열 봉합

대통령의 말 뒤집기도 지역갈등에 불을 붙이는 쏘시개 역할을 했다. 과학벨트·신공항 모두 대선공약이었다. 공약대로 진행됐다면 지금과 같은 후유증은 없다. 확실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뒤집으니까 분란을 낳은 것이다.

지역갈등을 수습하는 길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서 찾아야 한다. 수도권 일극집중을 억제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중심이 되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해야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 그러면 국책사업 선정은 순리대로 풀릴 수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은 실현 불투명한 선거공약 남발과 편협한 정책으로 지역갈등을 초래, 국정 혼란을 자초했음을 반성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정치 도의다.

남은 임기 동안이나마 지금처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제발 그만하기를 바란다. 계층 간 양극화도 모자라 지역 갈등까지 조장하는 정부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장〉 jhjung@kwangju.co.kr

사설

광주까지 날아온 방사능 철저한 대비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에서 누출된 것으로 보이는 방사성 요오드가 광주에서도 검출돼 충격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광주를 비롯한 서울, 제주 등 전국 12개 지방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 춘천에서는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과 세슘-134까지 나왔다. 다행히 인체에 해가 되는 방사선의 수준인 선량한도보다 요오드는 20만~3만분의 1, 세슘은 약 8만분의 1수준으로 인체나 환경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감도 팽배하다. 정부는 편서풍 때문에 일본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본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 10여 일 만에 강원도에서 방사성 제논이 검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요오드와 세슘이 전국에서 검출됐다. 불안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 원전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29일 방사성 요오드, 세슘에 이어 플루토늄이 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원전 방사능 공포가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징표다.

따라서 한반도도 어떤 상황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당국의 대응태세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방사능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쉬쉬하다가 불과 몇 시간 후 검출 사실을 발표했다. 이러니 국민이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후쿠시마발 방사성 물질 확산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예측과 분석, 신속한 경보체제 발동 등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서둘러야 한다.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해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안이하고 허술하게 대처해선 절대 안 된다.

국회의원 재산 대폭 증가, 서민 박탈감 크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대다수가 재임기간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파악됐다. 10억 원 이상의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최인기, 김효석, 김동철, 주승용, 박상천, 김영진, 유선호 의원 등 모두 7명에 이른다.

재선의 최인기 의원은 17대에서 24억2400만 원의 재산을 등록했으나 올해 신고액은 88억5000만 원으로, 그동안 63억7000만 원이 늘어나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 증가액을 기록했다.

3선의 김효석 의원은 16대 국회보다 18억 원이, 5선의 박상천 의원 역시 18대 국회에서만 14억6000만 원이 늘어났다. 3선의 유선호 의원은 15대 국회와 비교, 14억 원 이상 증가했고, 재선의 주승용, 김동철 의원도 각각 12억5000만 원, 11억6000만 원이 늘었다.

의원들의 대폭적 재산 증가는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주식 투자 덕분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신분을 마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물론 의원들이라고 재산을 불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투기성 재산 증식을 바라보는 일반 서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계속되는 가계 빚과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의원들이 변칙적으로 후원금을 받고 퇴임 후 연금 신설과 세비까지 인상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수십억 원의 재산을 늘리고 있으니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과학벨트 유치 및 아시아 전당 별관문제, 여수엑스포와 F1 그랑프리 예산 확보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는 찾기 어렵다. 할 일은 하지 않고, 의원직이 돈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착각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아예 기웃거리지 않는 게 낫다.

은펜칼럼

이병우

신입사원 시절 알았으면 좋았을 것 3가지

봄입니다.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절기의 변화는 거스를 수가 없나 봅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 초년생도 많을 것입니다. 한 조사기관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1위가 '처음 입사했을 때'(27.1%), 2위가 '실직 또는 이직했을 때'(18.2%), 3위가 '대학 입학'(17.1%)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한다면 신입사원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직장 생활의 방향이 결정되니까요. 지내놓고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당시엔 몰랐던 것이 참 많습니다. 필자가 지난 신입사원 시절을 되돌아보니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아쉬웠던 3가지를 지면을 통해 얘기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졸 사원과 고졸 사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80년대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20%대여서 당시엔 고졸 사원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두 분이 고졸 출신이었지만 탁월한 업적을 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분들이 고졸인 것은 머리가 총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한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태도나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나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만큼 사고의 폭이 크지 못했습니다. 홈 스쿨링의 창시자인 존 홀트는 "지적 능력은 얼마나 많은 방법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방법을 모를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측정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둘째, 직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일하게 되면 대책 없는 자신감마저 들어서 "내가 없으면 담당 업무가 안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생각이지만 당시엔 그렇게 생각이 짧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리를 바꾸니까 그 부서의 업무가 더 잘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라 명함에 적힌 직위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반성이 됩니다.

셋째, 전체적인 시각이 아니라 부분만 봤습니다.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주인의 차원이 아니라 머슴의 입장에서 봤다면 발전이 더딘 것은 당연하겠지요. "내가 CEO라면?"이라는 자문을 해보고 그 답을 찾는 노력을 했는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회사 경영 차원에서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찾아 봤어야 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세 명의 벽돌공 이야기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세 명의 벽돌공이 부지런히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벽돌공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벽돌을 쌓고 있어요." 두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습니다. "시간당 10달러짜리 일을 하고 있소." 세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요? 나는 지금 세계 최대의 성당을 짓고 있어요."

이제라도 세 번째 벽돌공이 되려고 하면 너무 늦은 것일까요?

〈보해양조 이사〉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전종화

전남에 종자산업 단지를

'한 알의 종자가 세계를 바꾼다', '금값보다 비싼 종자', '농업분야의 IT산업' 요즘 종자산업을 일컫는 말이다. 종자는 식량 확보의 중요 수단이며 농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전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돼 있다.

최근 종자(Seed)산업은 IT·BT·GT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20세기가 에너지전쟁 시기였다면 21세기는 식량전쟁의 시기라고 한다. 세계 인구 68억명 중에 7분의 1인 10억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하루 2달러 이하로 목숨을 연명하는 인구가 12억명에 이른다고 한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노만 볼로그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정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모든 인간을 위한 충분한 식량이다. 식량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도덕적인 권리다."

세계는 이미 종자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의 몬산토와 듀폰을 비롯한 글로벌 10대 종자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선점하고 있고, 그들끼리 상호협력을 통하여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으로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1만점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39만점, 인도가 34만점이다. 우리나라도 26만점으로 세계 6대 유전자원 보유국이다.

하지만 지난 1997년 국내 채소종자시장의 64%를 점유했던 4대 종자기업이 IMF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다국적기업에 넘어가면서 토종종자와 육종기술도 함께 넘어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현재 이들 다국적 종자기업들이 거꾸로 국내 종자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선 해외의존도가 높은 과수, 화훼 등의 종자를 집중 육성하여 수입대체 및 로열티부담을 덜어야 한다. 화훼나 비식량작물은 유전자조작에 따른 시장의 거부감이 적은 탓에 상품화가 용이하므로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신종자를 개발해 고부가가치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2020년까지 종자 분야 연구개발에 1조488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종자 수출 2억 달러, 세계 5대 유전자원 강국 실현이 그 목표다. 그 세부실행계획으로 총 270억원을 투자하는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전국적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종자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들어가는 정부의 기간산업이다. 정부는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업논리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간에게만 맡겨서도 안 된다.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전남은 친환경농업 추진으로 최근 전국적 재앙으로 창궐했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은 무균지역이다. 자연환경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금도 국내 양배추 종자 100%, 양파종자 90%를 생산(채종)하고 있다. 천연자원연구원과 생물방제센터를 비롯한 종자관련 연구개발(R&D)기관도 보유하고 있다.

종자단지 조성을 위해 전남도는 3년 전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남대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시설부지 100ha를 무상 공급하기로 하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종자산업으로 우리 농업의 판도를 바꾸는 대전환을 전남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

無等鼓

부(富)의 환원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말, 마오쩌둥은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던 큰아들 마오안잉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아버지의 말을 좇아 원수(元帥) 팽덕회의 러시아어 통역관으로 압록강을 넘은 마오안잉은 그러나 같은 해 11월25일 평안북도 동창군 대유동에서 미군 전투기가 투하한 네이팜탄에 맞아 숨진다. 팽덕회는 마오안잉의 시체를 거둬 중국으로 가져오려고 했지만 마오쩌둥은 '다른 인민군과 함께 묻히는 것이 도리'라며 거절했다. 마오안잉의 시체는 평안북도 회창군 인민지원군 총사령부 열사릉원에 묻혔다.

6·25전쟁 때는 미군 장성의 아들들도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했다.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를 누리는 사회 고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희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대가-목숨을 걸었다는 점에서 감동을 준다. 하지만,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없는 요즘에는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느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척도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이 재산을 늘렸다. 주식시장 활황과 부동산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재산도 5억8000여만원이 늘었다.

부(富)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복잡한 경제이론까지 들먹일 필요없이 바로 내 이웃, 내 나라에서 나온다. 내 이웃이, 내 나라가 없다면 어디에서 돈을 벌어 재산을 늘리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부는 사회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정인이 남보다 많은 부를 확보할 자격이나 능력이 정말 있는지를 묻는 것은 진부하고도 우스운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특정인에게 집중된 부가 공동체에 어떻게, 얼마만큼 환원되느냐 하는 문제다. 사랑과 존경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홍행기 정경부차장redplane@

불법 도급택시 범죄 악용 소지 많아 뿌리 뽑아야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택시 영업을 했다. 그런데 도급택시들이 너무 많아 시민들은 물론 일반 택시기사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도급택시는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빌린 뒤 무자격 기사들을 고용해 영업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무자격 기사들도 돈을 주고 택시를 빌리기 때문에 택시회사에서는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특히 이런 택시들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있다.

도급택시 기사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자, 무자격자 등이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운전중 사람을 칠 경우 뺑소니로 도망칠 확률도 높다.

또 이 택시들은 겉으로는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택시회사의 탈세 수단으로도 악용된다. 택시업체들이 스스로 도급택시 영업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기현·광주시 북구 용봉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